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9. 2.(수) 10:00
(지 면) 2026. 9. 2.(수) 석간

행안부, 2027년 예산안 84조 7,036억 원 편성...전년 대비 10.1% 증가

- ‘AI민주정부 구현’, ‘국민안전 강화’, ‘지역균형성장’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자
- 지방교부세 77.2조 원, 사업비 7.1조 원, 인건비·기본경비 0.5조 원 규모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.1% 증가한 84조 7,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.

지방교부세가 77조 1,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, 사업비 7조 634억 원, 인건비 및 기본경비 4,50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.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을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(AI) 적용을 확대하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하며,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.

2027년도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>>AI민주정부 구현 :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(AI)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

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‘혜택알리미’ 서비스를 1,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,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‘AI통합민원플랫폼’을 구축한다.

- ▶ 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: (‘26년) 56억 원 → (‘27년) 70억 원
- ▶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: (‘26년) 18억 원 → (‘27년) 203억 원

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(DR)를 구축하고,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.

- ▶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 : (‘26년) 2,523억 원 → (‘27년) 2,716억 원
- ▶ 공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: (‘27년 신규) 548억 원

공직자가 인공지능(AI)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‘온AI’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- ▶ 인공지능(AI) 행정업무 적용 : ('26년) 187억 원 → ('27년) 542억 원

>>국민안전 강화 :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

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비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,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.

- ▶ 재해위험지역정비 : ('26년) 1조 688억 원 → ('27년) 1조 1,579억 원
- ▶ 지역안전개선컨설팅 : ('26년) 56억 원 → ('27년) 120억 원

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-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. 또한,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,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,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.

- ▶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 : ('26년) 34억 원 → ('27년) 60억 원
- ▶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: ('26년) 400억 원 → ('27년) 430억 원

>>지역균형성장 : 지역이 스스로 일구어나가는 지속 가능 성장의 토대 마련

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·교육 강화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‘모두의 성장’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다.

- ▶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: ('27년 신규) 449억 원
- ▶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: ('26년) 238억 원 → ('27년) 320억 원
- ▶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: ('27년 신규) 27억 원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,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.

- ▶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: ('26년) 1조 1,500억 원 → ('27년) 1조 4,500억 원
- ▶ 섬 반값 여행 지원 : ('27년 신규) 12억 원

또한, 신설된 ‘미래대응기금’의 운용 취지에 맞게,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.

>>사회통합 등 :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

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, 40주년을 맞는 6·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책임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.

- ▶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(전남) : ('26년) 6억 원 → ('27년) 10억 원
- ▶ 6·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: ('27년 신규) 19억 원

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‘모두의 토론회’를 정례화하고,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도 추진한다.

- ▶ 국민참여정책 추진 : ('27년 신규) 13억 원
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AI민주정부, 국민안전, 지역균형성장,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”라며, “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,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5-14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현 (044-205-1411)



한눈에 보는

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안



지역균형성장

3조 211억

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 4,500억
-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
- 특수상황지역 개발 2,371억
- 접경권 발전 지원 891억
-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571억
-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449억



국민안전

1조 8,102억

- 재해위험지역 정비 1조 1,579억
- 재난복구비 2,001억
-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1,290억
-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430억
-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 393억
-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구축 124억



AI 민주정부

1조 4,696억

-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5,142억
-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2,590억
-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2,790억
-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723억
- 전자문서소통시스템 603억
-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 400억



사회통합 등

7,625억

- 제주4·3 피해보상 1,891억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407억
- 정부포상 220억
- 과거사관련 사업 지원 94억
-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66억
-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42억